

발간등록번호
KAMS-2023-008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연구

2023. 6. 22.



대한의학회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한국 의료 윤리 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제 출 문

대한의학회장 귀하

이 보고서를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6. 22

책 임 연 구 원	권	복	규	이	화	의	대	교	수
연 구 원	김	도	경	동	아	의	대	부	교 수
연 구 보 조 원	이	하	진	이	화	의	대	박	사 과 정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목표	2
3. 연구내용 및 범위	2
4. 연구방법	3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II. 연구 결과	4
1.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분석	5
2. 표준운영지침(안)	22
3. 표준운영지침(안) 해설	26
4. 징계 심의 규정	47
참고문헌	52
부록	55
1. 자문의견	56
2. 공청회 의견	63
2-1. 공청회 전사본	66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대한의학회 산하에 193개의 회원학회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의학 관련 학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역할,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학회마다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윤리위원회가 활발하게 가동되는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학회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 학회에 적합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역할, 운영 방안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여, 각 학회가 이를 자신의 학회에 걸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의학회의 주관으로 회원학회 윤리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목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를 위한 윤리위원회 표준 운영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윤리위원회의 구성, 목적, 의사진행, 의결과 집행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2023년부터는 회원학회에 표준운영지침의 보급이 가능하도록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한다. 연구내용은 의학회 회원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제시하고 구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원학회 윤리위원회는 1)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교육 및 고취 2)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에 대한 계도 및 징계 3) 의료윤리, 또는 임상윤리적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4) 학회별 의료윤리지침의 개발과 갱신 5) 기타 학회별 고유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되며, 각각의 비중은 학회마다 조금씩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표준운영지침은 최대한 유연하게 학회의 필요에 따라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으로 구성될 것이며, 운영지침에 대한 해설서가 별도로 제공될 것이다.

4. 연구방법

1) 국내외 자료 수집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학회의 운영 규정, 혹은 지침을 수집, 분석하고 해외의 유사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2) 연구진 회의

정기적으로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운영지침 시안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며, 이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 관련 학회 임원 및 의료윤리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다.

3) 법률 자문

대한의학회의 정관 및 일반 관례와 의료법 등 관련법과 어긋나는 점이 없도록, 또한 윤리지침의 내적 구성에서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한 운영지침 초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할 것이다.

4) 전문가 자문

연구추진 과정에서 의료윤리 전문가와 여러 회원학회 임원, 그리고 대한의학회 윤리위원회에 자문하여 개발한 운영지침의 실현 및 응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5) 공청회

연구진이 개발한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지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회원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지침에 반영할 것이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의학회 각 회원학회가 자체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운영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 결과

1.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분석

1) 목록

번호	학회명
1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2	대한고혈압학회
3	대한내과학회
4	대한내분비외과학회
5	대한노인병학회
6	대한노인정신의학회
7	대한뇌졸중학회
8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9	대한류마티스학회
10	대한마취통증의학회
11	대한방사선종양학회
12	대한법의학회
13	대한병리학회
14	대한생물정신의학회
15	대한성형외과학회
16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7	대한소화기학회
18	대한슬관절학회
1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	대한심장학회
21	대한연하장애학회
22	대한영상의학회
23	대한우울조울병학회
24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5	대한의사학회
26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7	대한이식학회
28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9	대한통증학회
30	대한폐암학회
31	대한핵의학회
32	한국간담췌외과학회

2) 윤리위원회 구성

구분	인원수	선출 방법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임명과 역할
1	• 10명 내외	•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 임명	• 2년(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윤리 이사(당연직), 학회 이사장 임명 • 부위원장 및 간사: 윤리위원 중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 임명
2	• 5명 이내	• 위원장 제청으로 이사장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윤리 이사 • 부위원장 및 간사: 위원장 추천으로 이사장 임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로 안배 • 각 분과에 법률 전문 변호사, 개원내과의사회에서 1명씩 추천받아 구성 •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 임명 	• 학회 임원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윤리 이사(당연직), 학회 이사장 임명 • 부위원장 및 간사: 윤리위원 중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 임명
4	•	•	• (이사 기준) 2년(연임 가능)	
5	• 7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 위촉 • 당연직: 연구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 2년	• 위원장: 윤리이사
6	* 조사위원회 기준 • 5인 이내	* 조사위원회 기준 • 간행위원 중 2인 선임 • 외부전문가 2인 선임		* 조사위원회 기준 • 위원장: 간행위원장
7	•	•	•	•
8	• 1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추천 5명(경력 10년 이상) • 당연직: 회장, 전임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 2년	• 위원장: 법제윤리이사
9				
10	• 위원장 1명, 위원 15~20명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의협 및 학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회원 • 학회의 7개 지회장과 개원의협의회장이 추천한 적격자 중 5인 위원장 선임, 평의원과 세부전공학회에서 추천한 적격자 중 5인 위원장 선임 • 학회 외부 윤리위원: 회원이 아닌 자 중 법조인 중 1인, 종교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 중 1인. 이사장 선임 • 당연직: 이사장, 기획이사, 법제이사 	• 2년(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이사장 임명. 윤리위원회 대표, 윤리위원회 업무 총괄 • 간사: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위원장 보좌,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관장. 위원장 직무대행 가능

구분	인원수	선출 방법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임명과 역할
11	• 위원장, 간사 포함 9명	• 당연직: 연구이사, 간행이사 • 신임 위원 선출 시 전임 위원 3분의 1 이상 잔류 위촉	• 2년(연임 가능)	• 위원장: 윤리이사 겸임 • 간사: 위원 중 선출
12		• 학회장 선출	• 2년	• 위원장: 총괄부회장 겸임
13	• 위원장 1명, 위원 10~15명 내	• 위원장 선임 • 당연직: 간행이사, 편집위원장	• 2년(연임 가능)	• 위원장: 회원 중 이사장 임명. 위원회 대표 및 대한병리학회 평의원, 위원회의 제반 업무 총괄 • 간사: 위원 중 위원장이 선임. 위원장 보좌, 위원회 회무 담당, 회의록 작성·보관
14			• 2년	• 위원장: 상임이사 중 1인
15	• 10인 내외	• 윤리이사 추천 및 이사회 승인	• 2년(연임 가능)	
16		• 전임 이사장 중 위원장 추천, 이사장 위촉	• 2년(위원장, 위원 중 임 가능)	
17	• 위원장 1명 포함 7인 이내	• 당연직: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윤리법제이사 • 추천직: 외부 인사 포함, 위원장 임명		• 위원장: 이사장
18	• 10명 이내	• 위원장 추천, 회장 임명	• 위원장: 2년(연임 가능) • 위원: 기본 2년이나 1년, 2년으로 구분(연임 가능)	• 위원장: 학회장 추천, 평의원회 인준 • 간사: 위원 중 선임. 위원장 보조
19	• 15인 - 9인은 학회 회원(1인은 정신건강의학화 전공의 대표) - 6인은 학회 회원이 아니 사회 각계 인사로 위촉	• 위원장 추천, 이사장 임명	• 6년(연임 불가) - 2년마다 위원의 3분의 1 교체 - 전공의 대표 임기는 1년	• 위원장: 추천위원회 추천, 대의원회 동의 • 간사: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
20	• 10명 내외	•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장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음	• 학회 임원 임기	• 위원장: 학회의 윤리이사, 이사장 임명 • 간사: 위원 중 위원장 추천, 이사장 임명. 위원장 보좌 및 회무 담당
21				
22	• 위원장 포함 9인	• 상임이사회 추천, 회장 위촉(평의원회 추천 필수)	• 3년(연임 가능)	•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평의원회 인준, 회장 위촉
23				
24				
25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 위촉	•	• 위원장: 회장 임명
26			• 2년	• 위원장: 회원 중 위원 추천, 회장 임명. 회무 총괄 및 위원회 소집

구분	인원수	선출 방법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임명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위원장: 회장 임명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윤리위원장 겸임 • 간사: 위원 중 위원장 임명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 13~15명 이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의협 및 학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회원 중 선임 • 필요 시 회원 중 적격자나 회원이 아닌 사람 중 위원 추가 선임 가능 • 당연직: 학회장, 기획이사, 법제이사 • 학회 지회 추천 1인,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 추천 1인, 평의원 중 학회장 추천 1인 • 학회 외부 위원: 회원이 아닌 자 중 법조인 1인, 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 중 1인 학회장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문화윤리이사 겸임. 위원회 대표, 위원회 업무 총괄 • 간사: 위원장이 위원 중 선임. 위원장 보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관장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 조사위원회 기준</u> •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사장 임명 • 간사: 위원장 추천, 이사장 위촉

3) 윤리위원회의 운영

구분	정기회의	부정기회의	정족수	제척 및 기피 사유 (회원 징계 등)
1	• 1년에 1회	• 필요에 따라 위원장 소집	• 성립: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 결정)	• 제척: 위원회 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2	• 1년에 2회	• 필요에 따라 위원장 혹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시 소집		
3	• 1년에 4회	• 필요에 따라 위원장 소집	• 성립: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 결정)	• 제척: 피심의인과 친족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기피: (피심의인) 윤리위원회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 회피: (위원)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5			• 성립: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제척: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피: (피조사자)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은 불가
6				
7		• 위원장 소집	• 성립: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	
8				
9			* 징계 기준 • 심의: 법제윤리위원회 정원 3분의 2 이상 출석 • 의결: 출석 위원 과반 수 찬성	• 제척: 위원이 피심의인과 친족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기피: (피심의인) 법제윤리위원회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10	1년에 2회	• 필요에 따라 위원장 소집 • 이사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있을 시	• 성립: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 결정) • 징계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제척: 위원(장)이 당해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 기피: (심의대상자)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 제척, 기피 위원 3인 이상의 경우 이사장 임시위원 위촉 가능

구분	정기회의	부정기회의	정족수	제척 및 기피 사유 (회원 징계 등)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위임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척: 위원(장)이 당해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 시 개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심의·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도 인정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이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심의·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 및 운영세칙 개정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의결 	
15				
16				
17				
1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의 경우 윤리인권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과반 이상의 찬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혹은 위원 과반수 요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 의결)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경우 위원장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위임장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 미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척: 위원이 조사 대상 연구에 관련될 경우.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기피: (피조사자)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징계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 	

구분	정기회의	부정기회의	정족수	제척 및 기피 사유 (회원 징계 등)
23				
24				
25				• 제척: (위원) 검증 대상 연구와 관련되는 경우
26				
27				• 제척: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 등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8			* 징계의 경우 • 상정: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 • 결의: 참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 • 자격박탈의 경우 평의원회 참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	
29	• 1년에 2회	• 필요에 따라 위원장 소집 • 학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 성립: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 결정) • 회원자격 정지 및 상실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제척: 위원(장)이 당해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 기피: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 회피: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30				
31				
32		• 이사장 또는 위원장 요청이 있을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4) 윤리위원회 역할과 기능

구분	학회 의료윤리 지침의 제정 및 개정	학회 의료윤리 관련 교육	학회 관련 표준 진료지침·권고안 등 윤리 자문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관련 업무	문제가 있는 회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학회별 고유 업무
1				○		• 학회 운영비 집행
2			○		○ • 징계는 이사회 승인 필요	• 의료 윤리 위반 행위 심사
3		○	○		○ • 징계는 이사회 승인 필요	
4						
5	○			○		• 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의 승인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6						
7						
8	○				○	• 회원 표창
9					○ • 징계는 이사회 승인 이후	
10		○		○	○ • 징계는 이사회 승인 이후	• 연구윤리 및 의사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심의, 제재 • 학회의 명예와 품위유지 및 도덕적 행위 관련 사항 • 의료 윤리 관련 타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11	○	○			○ • 비윤리적 행위 자율 규제 • 징계는 이사회 의결 이후	•
12				○ • 연구윤리 제반	○ • 징계는 평의회 및 총회의결 이후	

구분	학회 의료윤리 지침의 제정 및 개정	학회 의료윤리 관련 교육	학회 관련 표준 진료지침·권고안 등 윤리 자문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관련 업무	문제가 있는 회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학회별 고유 업무
13	○	○		○	○ • 징계는 상임 이사회 승인 후	• 의사윤리지침 위반 관련 사항, 위반 사례 제재
14				○		• 학술연구
15	○			○	○	
16	○	○			○	
17				○		
18			○		○	
19	○	○			○ • 비 윤 리 행 위 자율 규제	
20		○	○ • 부적절한 의료 행위의 종류, 범위에 대한 심사 및 예방 대책 강구		○	
21				○ • 연구윤리 확립 • 연구부정행위 예방, 조사 • 연구윤리 위반 검증, 후속조치		• 제보자 보호, 비밀유지
22	○ • 윤리의식 제고 및 연구		○ • 윤리지침 제정 및 자문		○	•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회원 포상 및 징계
23						
24						
25						
26				○		
27				○		
28						
29		○		○	○	• 학회 품위 유지 및 도덕적 행위 • 의료 윤리 관련 타 기관과 연락 및 상호 협조, 섭외
30						
31						
32	○	○			○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구분	회원 징계 사유의 범위	소명 및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1		1) 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결과는 피신청인 즉시 통보 2) 징계 필요시 의결일 15일 이내에 징계 위원회 보고 3) 피신청인은 통보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4) 위원회는 15일 이내 최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년 이전의 비윤리 행위 처리X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회 명예 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1) 개시 후 7일 이내 징계 대상자 통보 2) 의결 후 7일 이내 서면 통지 3) 징계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4) 위원회는 청구일 15일 이내 재심사 후 재결정 5) 결정 후 7일 이내 서면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자격정지 제명 기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내과과의사 윤리 위배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기타 의료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본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이 비방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 또는 윤리위원회 접수, 심의여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 60일 이내 심의, 의결결정은 120일 이내 심의사실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 원칙 징계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 청구 가능 재심 청구 30일 이내 윤리위원회 소집, 60일 이내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0일 추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및 시정 지시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증명서 교부 요청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질의 및 협조요청 학회지 및 학술자료 수수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명 기타(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범칙금 부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 결정 사항은 이 사회의 승인 필요 재심 청구 횟수는 1회 제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의료 윤리상 품위를 손상한 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조사: 신고접수 15일 이내 착수, 시작일 30일 이내 완료. 결과는 위원회 조사 후 10일 이내 이사장 및 제보자에게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상신 연구 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중단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연구사업 참여 제한 우수논문상 등 연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0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 처리X

구분	회원 징계 사유의 범위	소명 및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p>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조사: 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승인 30일 이내 착수, 판정은 시작일 90일 이내 완료.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재심의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요청 	<p>련 수상 제한</p>	
6			<p>* 조사위원회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철회 교신저자 및 1저자 3년간 투고 금지 홈페이지, 관계기관, 한국연구재단 통보 	
7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류마티스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윤리 위배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기타 의료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본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이 비방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 사무국 또는 법제윤리위원회, 심의 여부 심사는 소위원회(위원장, 간사로 구성)에서 진행 접수 60일 이내 심의, 120일 이내 이의 결정 소집 14일 전까지 피심의인 통보 징계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 청구 가능 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제윤리위원회 소집, 60일 이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및 시정 지시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증명서 교부 요청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질의 및 협조요청 학회지 및 학술자료 수수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명 기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벌칙금 부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결정 사항은 이사회 승인 필요 재심 청구 횟수 1회 제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의료법과 의협의 회칙 등의 규정 위반의 경우 의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를 포함)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 및 접수: 실명으로 제보 가능. 익명 제보의 경우 증거가 구체적이면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발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윤리위원회에 요청. 위원장이 발의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발의 가능. 단, KJA 편집위원회, APM 편집위원회, 소속기관이나 의협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심의 중일 때는 징계절차를 연기하거나 징계결과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및 시정 지시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일정기간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의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징계 심의 불가

구분	회원 징계 사유의 범위	소명 및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p>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의 운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모임을 갖는 행위와 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학회 고유의 진료 전문영역을 침해하려는 단체에 참여하여 학회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학회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이외의 의료인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혹은 그러한 주장, 정책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p>징계심의를 발의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 통보: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심의대상자에게 통보 •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 승인 이후 심의대상자에게 14일 이내 서면 통보 • (심의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위원장은 즉시 재심 여부 결정,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시 결정. 결정 30일 이내 위원회 소집(30일 연장 가능)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부정 또는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안 • 학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 • 동료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기타 윤리적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위반 또는 제보된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회원만 가능 • 사전조사: 위원장은위원 중 최소 3인을 사전조사위원으로 위촉.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접수 30일 이내 이사회 보고 •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심의대상자에게 통보 • 이사회 징계 의결 이후 심의대상자에게 15일 이내 서면 통보 • 이의 신청은 통보 이후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및 시정지시 •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회원자격의 일시 정지 • 회원자격의 상실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 행위 - 변조 행위 - 표절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중복게재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규정을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소집 7일 전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규정 위반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 결정은 상임이사

구분	회원 징계 사유의 범위	소명 및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p>한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회원의 친목을 훼손한 행위 •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이나 평론을 행하는 행위 	<p>의대상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자 결과 통보 일 1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사 청구 가능 • 위원장 재심 청구일 30일 이내 위원회 소집, 60일 이내 징계 결정(30일 연장 가능) 	<p>련 징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지에서 논문 및 논문목록 삭제 -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제 1저자의 학회 공식 학술지에 일정 기간 투고 금지 -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사실의 통보 -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위반사실의 통보 - 대한병리학회의 연구비일 경우 연구비 회수 • 의사윤리지침 위반 및 기타 징계 - 경고 및 시정지시 - 고발 및 행정처분의뢰 - 일시적인 회원자격의 정지 - 회원자격의 상실 	<p>회 승인 후 가능</p>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칙위배 및 본회질서 문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칙에 명기된 의무를 태만한 행위 - 본회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 • 의사 윤리 위배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위 - 비과학적, 비도덕적인 행위 - 본회 윤리강령 및 윤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 본회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다른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을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처분 통보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 청구 가능 • 재심 청구 송달 30일 이내 윤리위원회 소집 및 재심 결정(30일 연장 가능) • 징계결정 사실 서면으로 피심의인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및 시정지시 • 회원 권리 정지 • 제명 •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소: 문서화된 제소, 증거가 있는 익명으로 제보된 건, 사회적으로 노출된 건은 이사회 검토와 의결 후 접수 • 검토,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정보 추가 요청 시 제소자는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견책 • 자격 정지 • 자격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안으로 타 학회에서 이미 제소 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

구분	회원 징계 사유의 범위	소명 및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p>일 이내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제소자는 통지서 받은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증거 제출 • 소집: 회답 이후 30일 이내 회의 소집 • 출석 요구: 회의 15일 전 출석 요구서 서면 발송. 피제소인이 참고인, 대리인 대동 시 회의 3일 전까지 위원회 통보 및 위원장 동의 필수 • 결과 통지: 위원장은 징계 내용을 7일 이내 이사회에 보고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경고 • 문책 • 엄중문책 	
1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사전 조사: 조사위원 2인 위촉, 내용 파악. 윤리 위반 행위 미확인의 경우 제소인에게 통보, 15일 이내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 2인 위촉 후 재조사. • 심사회: 위원장 위촉 5인으로 구성, 이 중 최소 3인은 윤리인권위원 • 출석 요구 • 청문 심사회 진행: 접수 6개월 이내 완료 • 이의신청: 통보일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회원자격정지 • 제명 • 추가 조치: 교육명령, 치료명령, 지도감독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제소인은 학회회원 • 윤리 위반 행위는 발생한지 10년 이내의 행위여야 함(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기한 제한에 미포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명예 훼손 • 의료윤리 위배 행위 • 상호간 친목저해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 및 접수 • 부정 행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이의제기 및 소명 • 판정 • 결과 통지 • 재조사: 통지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구 가능 •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 교육적인 주의 서한 발송 • 재발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 서한 • 중복출간, 또는 표절을 해당 학술지에 고시 및 취소 • 위반사항 전모에 대한 간행인의 글 •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 • 회원 자격 박탈 및 정지 	

구분	회원 징계 사유의 범위	소명 및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적절한 조치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영상의학회 회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한 행위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의사윤리를 위배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 경우 통고일 20일 이내 청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권리의 일부에 대한 한시적인 유보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경고 및 시정지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자격정지 제명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출판윤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소 심의: 위원회 구성 15일 이내 착수 이의제기 및 소명 완료: 심의시작일 30일 이내 완료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재 취소, 논문 삭제 향후 5년간 투고 금지 홈페이지 및 학회지 공시 소속기관 및 학술진흥재단 통보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된 논문 중 부정 행위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 접수: 실명 원칙 예비조사: 신고 14일 이내 착수, 28일 이내 완료.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 승인 후 7일 이내 제보자에게 통보 본조사: 예비조사 결과 바탕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 승인 후 7일 이내 착수, 3개월 이내 완료. 반론 기회 제공. 최종 판정 후 7일 이내 이사장 보고, 보고 후 14일 이내 제보자/피조사자 통보 재심: 결과 통지 14일 이내 소명서 제출. 재심 판단은 위원회가 14일 이내 결정, 재심의 결정 이후 14일 이내 위원회 재소집 가능. 재심의 60일 이내 판정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회지 게재 불허 학회지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1년 이내의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박탈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의료법과 의협의 회칙 등의 규정 위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 실명 제보, 익명 제보 시에는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 발의: 학회장 또는 이사회 결정, 위원장 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및 시정 지시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일정기간 회원자격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한 후에는 징계 심의 불가

구분	회원 징계 사유의 범위	소명 및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를 포함)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학회의 운영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모임을 갖는 행위와 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학회 고유의 진료 전문영역을 침해하려는 단체에 참여하여 학회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다른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학회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이외의 의료인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혹은 그러한 주장, 정책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p>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집: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심의대상자에게 통보. 소명 기회 제공 의결: 상임이사회 승인 후 14일 이내 심의대상자 서면 통보 재심: 통보일 30일 이내 서면 재심사 청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자격의 상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조사: 신고접수 30일 이내 착수. 본조사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결정일 10일 이내 제보자 서면 통보. 이의제기 통보일 30일 이내 가능 본조사: 의견진술 및 변론 기회 제공 판정: 전체 6개월 이내 완료. 이의신청은 통보일 30일 이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회지 게재 불가 학회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일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X
32				

6) 기타

구분	운영지침의 제정과 개정	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학회실 행의사회 인준을 통해 개정 	
2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내규 변경시 위원회 심의 후 상임위원장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상임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추후 임·평의위원회에 보고 	
30		
31		
32		

2. 표준운영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의학회 산하 ○○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업성'이란 의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의미한다.
2. '연구윤리'란 학술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3. '연구진실성'이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윤리원칙에 따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위원장과 윤리위원을 합하여 '윤리위원'으로 함)으로 구성된다.

② 윤리위원을 선임할 때, 의료윤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성별, 연령, 직역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대표자(이사장, 또는 회장)가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에는 의료윤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이나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권장).

⑤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 1/3 이상은 연임하도록 한다. 보선된 위원 1/3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윤리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은 연 1회 이상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비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학회 대표자(이사장, 또는 회장)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며,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회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윤리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된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회원 징계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지원) ①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소속 학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근/비상근 행정직원(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매년 결산을 포함한 사업 결과를 서면으로 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과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전문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소위원회, 임시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운영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제10조(학회 윤리지침의 제정과 개정) ① 위원회는 학회 윤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며, 그 해석을 담당한다.

② 학회 윤리지침은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임상가이드라인, 또는 임상진료지침 등에 관해 그 윤리적,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11조(회원 교육) ① 위원회는 소속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학회 회원들의 직역, 교육 내용의 타당성, 강사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 출판위원회 등 유관 기구와 더불어 연구윤리에 대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제12조(전문직업성 고취) ① 위원회는 회원의 전문직업성 고취를 위한 포상, 모범 사례 전파, 사회봉사와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가 기업 등으로부터 금전 등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대외협력) ①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구와 협력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윤리 쟁점에 대해 소속 학회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경우 학회를 대표하여 이를 주관한다.

제14조(의료윤리 진흥 활동) ① 위원회는 자체 의료윤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수 지원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속 학회와 관련된 의료윤리 출판물이나 홍보물의 발간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회원 징계) ① 위원회는 학회 회원이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였을 때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에 자율징계를 상정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2. 통상적 회무 방해 행위

② 회원의 징계 심의 절차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규칙’을 따른다.

③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④ 그 외의 징계가 요구되는 행동은 학회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기타) ①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사회상규,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가 제정한 윤리지침 등은 대한민국의 법규와 국제법, 그리고 헬싱키선언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 윤리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 운영지침 하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

④ 세부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침의 개정) ①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3. 표준운영지침(안)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의학회 산하 ○○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대한의학회 산하학회 중 윤리위원회가 있는 학회에 적용할 수 있다. 자체적인 운영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우선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거나 신규로 윤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을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의 내용은 권고사항이며 각 학회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이 지침의 목적은 윤리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학회를 대상으로 학회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업성'이란 의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의미한다.
2. '연구윤리'란 학술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3. '연구진실성'이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윤리원칙에 따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용어의 해설은 필요한 최소한만을 둔 것으로 역시 각 학회의 특성에 따라 수정 및 변경, 추가가 가능하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위원장과 윤리위원을 합하여 '윤리위원'으로 함)으로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의 역할

- 원활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학회 내의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발전과 학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조직되며, 윤리위원회 해당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그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이익만이 아니라 학회가 의료전문직 집단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즉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의 윤리위원회는 학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학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2. 윤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확보

-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방향성을 성찰하고 조언하며, 학회나 학회 구성원들이 처한 이해상충 상황을 조정, 학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구성은 내·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이해상충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5인 이상”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로서 실제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규모와 윤리위원회에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윤리위원은 의료윤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성별, 연령, 직역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1. 성별, 연령, 직역 등의 고려

-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선출에 있어 성별, 연령, 직역 등을

고려하며, 학회의 업무와 역할에 맞춰 위원회가 다방면의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한다. 윤리위원회는 전공의, 1~3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 만약 있다면 비의사회원 등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해당 윤리위원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공의는 윤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회원 징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2. 규정 예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③위원은 총 15인으로 하며, **위원 중 9인은 학회 회원, 6인은 학회 회원이 아닌 사회 각계 인사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 회원인 위원 중 1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대표로 한다.**
-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상임이사인 윤리이사가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둔다. 전체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20명 내외로 위촉하고 투표 결정의 경우에 대비 위원장 포함한 전체 위원을 홀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투석 개원의 협의회와의 필요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대한투석협회 윤리이사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개원의 회원을 최소 2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윤리위원의 수

-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지만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학회의 규모와 구성원의 다양성에 따라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성이나 연령, 직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다.

③ 윤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대표자(이사장 또는 회장)가 임명한다.

1. 윤리위원장의 추천

- 일반적으로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의 대표자(회장, 또는 이사장)가 임명하게 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회가 여러 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직역에서 윤리위원을 천거하여 임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2. 윤리위원의 자격

- 윤리위원은 해당 학회 소속 회원 중에서 의료윤리, 혹은 의료법 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윤리위원은 해당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예컨대 회비 납부)를 충실히 이행한 전력이 있어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공신력을 위해 사회적, 인격적 명망을 갖춘 사람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은 이 운영지침에 명문화할 수도 있고, 사회상규로서 굳이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의료윤리에 대한 일반적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법조인이나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권장).

1. 전문가의 필요성

-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법조인이나 의료윤리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학회는 이룰 수 있는 재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는 권고사항으로 둔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조인이나 의료윤리전문가를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반드시 법조인이나 의료윤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윤리위원회 결정의 공신력과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학회 외부인사 1인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인사는 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 언론인, 혹은 공익단체 관계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어떠한 인사가 바람직한지는 학회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

2. 규정 예시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4. **학회 외부 윤리위원 2명은 회원이 아닌 자 중 법조인 1인과 종교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 중 1인을 이사장이 선임한다.**
- (대한심장학회) 제4조 4. **법률고문 변호사, 개원의 등 외부 인사를 필요시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 1/3 이상은 연임하도록 한다. 보선된 위원 1/3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1. 윤리위원의 임기

- 윤리위원은 다른 임원들처럼 임기가 있어야 하지만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원 중 일부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을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선된 위원 1/3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임의 의미

- 위원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 1/3이상 위원들의 연임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권고사항일 뿐 학회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위원 1/3 이상의 연임이 어려운 경우 학회는 연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규정 예시

-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 및 간사의 선정) 2년 마다 이사진이 바뀌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바뀌는 경우, 신임위원장은 신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일의 연속성을 위하여 신임위원 선출 시 전임위원들 중 최소 1/3 이상의 위원을 잔류 위촉하는 것이 권장된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의 및 판단에 무게를 주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이상의 신망 있는 신장학회 회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적절한 위원을 간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윤리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은 연 1회 이상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윤리위원의 자격 유지

- 윤리위원의 자격 유지 조건으로 1년에 1회 이상 대한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의료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한의학회는 산하 학회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학회는 윤리

위원들이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윤리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

- 학회 윤리위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대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의료윤리위원 워크숍, 컨퍼런스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윤리위원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대면/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 학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윤리위원장의 선출, 혹은 임명은 각 학회의 규모, 전통, 기능, 윤리위원회에 기대되는 역할, 회장 및 이사장의 선출 방식, 총회와 대의원회(이사회)의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위원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방법의 예시이다.

1. 총회(평의원회/대의원회/이사회)에서 선출

- 학회는 윤리위원장을 총회(평의원회/대의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어느 경우든 현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추천위원회에서 선출

- 학회는 자체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3. 규정 예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① 현임, 전임 및 차기이사장과 현

임, 전임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대한영상의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① 위원장은 임원추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인준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윤리위원회 호선

- 전임 윤리위원회에서 차기 위원장을 호선하거나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윤리위원장이 위원 추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4. 이사장(회장) 임명

- 다수의 학회는 이사장이 임명한 윤리이사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다양한 사업(교육, 홍보, 차기 전문가 양성 등)을 이사회와의 협조 아래 운영하는데 용이하지만, 학회 내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요청된다. 임명권자와 동의권자를 분리하는 방법(예를 들어 이사장이 임명하지만 선임 이사회나 윤리위원회가 동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 혹은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계획과 활동에 대해 이사회와의 허가 및 승인이 아닌 이사회(혹은 총회)에 대한 보고에 그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비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제반 업무로는 학회 윤리지침 등의 제정과 개정, 학회 임상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에 대한 윤리적 검토 및 자문,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 연구윤리 진흥 활동, 학회 이해상충 관리, 회원의 전문직업성 고취, 학회 내 의료윤리 전문인력의 양성, 대외협력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위

원장은 그 자리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경험, 또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학회 대표자(이사장 또는 회장)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 중에서 대표자인 이사장(회장)이 임명하는 것을 권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며,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이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한다.

- 부위원장의 주된 역할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 자신이 회의 안건과 이해상충이 있거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이사장의 징계 등이 안건인 경우 등) 이사장을 대리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된다.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 위원장을 학회 윤리이사가 맡게 되면 간사를 별도로 임명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간사는 윤리이사가 맡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은 학회에 따라 “간사는 학회의 윤리이사로 임명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윤리이사는 당연직 윤리위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회의 안건을 작성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간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윤리위원회 간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7조(정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회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기회의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정기위원회의 일정은 사전에 정해놓을 수도 있고, 혹은 이사회나 총회 등의 일정에 따라 가변적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 정기회의의 안건

- 매년 신규 사업계획의 승인, 정기 교육 등을 포함한다.
- 매년 전년도 사업계획 결산 보고
- 위원 구성(신규 위원 및 임원 선출) 필요시
- 정기적인 윤리지침 등의 개정 : 필요시
- 기타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의 의결

3. 임시회의

- 정기회의 외에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임시회의가 필요한데, 회의 개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학회 대표자 단독, 혹은 재적위원의 1/3 이상의 요구, 그 밖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때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임시회의 역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외 사항들도 정기회의의 내용을 준용한다.

4.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예시)

- 윤리위원회의 성원 변경: 위원의 보궐과 보선 등
- 학회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진료 지침 등에 대한 윤리 검토와 자문
- 학회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 각종 비정기적 사업에 대한 추진 결정과 결과 보고
- 학회의 윤리 사안에 대한 대외 입장 표명 등에 대한 검토와 자문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성원의 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위해 필요한 참석위원의 수를 의미한다.
- 윤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가급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사안에 따라 위원 개개인의 가치와 식견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윤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의결기구가 아닌 윤리적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윤리위원회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하여 화상미팅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녹화 등으로 회의 종료시까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의결 사항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운영지침의 시행세칙으로 둘 수 있다.

2. 규정 예시

-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대한병리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③ 및 대한성형외과학회 윤리위원회 운영세칙 7조 1항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상임이사인 윤리이사가 윤리위원장(이하 위

원장)을 겸임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둔다. 전체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20명 내외로 위촉하고 투표 결정의 경우에 대비 위원장 포함한 전체 위원을 홀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투석 개원의 협의회와의 필요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대한투석협회 윤리이사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개원의 회원을 최소 2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된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 회의 안건이 특정 윤리위원과 관련되거나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논의 및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④ 회원 징계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규칙'에 따른다.

- 회원 징계 사안은 심각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지원) ①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소속 학회에 요청할 수 있다.

- 학회는 윤리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가지고 아래 3조에 제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원의 규모는 학회의 규모와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은 제공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근/비상근 행정직원(직원)을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학회 의료윤리 지침 재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행·평가, 기타 사업추진 등의 활동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근/비상근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 상근/비상근 행정인력은 학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학회의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다.
- 상근/비상근 행정인력에 대한 관리는 윤리위원회 간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위원회는 매년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회는 윤리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그 해의 주요 사업, 즉 윤리위원 교육, 자체 윤리교육, 윤리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기타 예상되는 필요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의 서식은 학회가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매년 결산을 포함한 사업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매년 결산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또는 학회의 감사는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업 수행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보고서와 결산안의 서식은 학회가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9조(전문위원과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의 예로는 의료윤리전문가, 법률전문가, 해당 임상분야 전문가, 행정전문가 등을 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전문위원에 대한 보수 등은 학회의 형편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전문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자격은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문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자문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소위원회, 임시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운영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윤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산하에 소위원회(상설) 혹은 임시위원회(비상설)를 둘 수 있으며, 그 목적과 구성은 시행세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 윤리위원회는 소위원회 혹은 임시위원회의 운영과정과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추가적인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소위원회/임시위원회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회 윤리지침 제·개정 소위원회, 임상가이드 라인 또는 임상진료지침 검토소위원회, 윤리교육과정개발 소위원회 등

제4장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제10조(학회 윤리지침의 제정과 개정) ① 위원회는 학회 윤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며, 그 해석을 담당한다.

- 학회의 윤리지침·강령은 학회 회원이 전문직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개인의 행동을 규정함으로써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대한의학회의 일원인 각 학회는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취지와 가치에 공감하며 해당 학회의 학문 분야와 활동에 적합한 지침과 강령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학회의 윤리지침과 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초안을 마련하며 또한 시대와 학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담당해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지침과 강령에 내포된 전제와 의도, 의미를 해설하는 해설서를 작성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윤리지침과 강령, 그리고 해설서는 소속 학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학회 윤리지침과 강령의 예시로는 2017년 전면 개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윤리강령과 의료윤리지침이 있으며, 2007년에 제정된 대한내과학회의 “내과 의사 윤리선언”이 있고, 해설서의 구체적 예시로는 2020년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로 제작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해설서가 있다.

② 학회 윤리지침은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다.

- 학회 윤리지침은 시대와 학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한지, 부정기적인 개정만으로 충분한지는 각 학회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 일반적인 윤리지침의 제·개정 작업은 이사회 등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임상가이드라인, 또는 임상진료지침 등에 관해 그 윤리적,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의학적 가이드라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회는 회원들의 판단을 돕는 지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규모의 재난 상황에서 자원 분배(COVID 19에서 중환자실 의료자원의 분배), 법과 윤리가 갈등하는 문제(낙태, 연명의료중단, 장기이식 등)에서 회원들의 판단의 부담감을 줄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학회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의 가이드라인은 의학적 근거만으로 작성될 수 없으며, 윤리적·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윤리위원회는 학회가 제시하는 임상가이드라인 혹은 임상진료지침 작성에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의 윤리적 법적 측면을 점검하고 검토하며, 적절한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회원 교육) ① 위원회는 소속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학회 내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윤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교육 내용에는 해당 학회 학문 분야의 주요 쟁점이나 회원들이 흔히 만나는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윤리교육의 내용이 회원들의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전공의를 위한 전체 회원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등이 포함된다.
- 윤리위원회는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윤리세션 활용하여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들의 윤리 교육

(2) 교육 자료집 발간

-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의료윤리 사례집』 (2022년 3판)
-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의료윤리』 번역, 2019. 2

(3) 의료윤리워크숍 개최

- 대한중환자의학 2022년 5월 학술행사 중 ‘Clinical Ethics Conversations for Physicians and Nurses’ 세션 운영
-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 워크숍 2021. 9

(4) 사이버 윤리교육

- 대한내과학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Vz311gu6gLRVD_CHaMiPr58rCMSeTaPs

② 위원회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학회 회원들의 직역, 교육 내용의 타당성, 강사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윤리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교육방법이 효과적일지, 강사진은 적절한지,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자문을 구하거나, 혹은 대한의학회 윤리위원회 또는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회 출판위원회 등 유관 기구와 더불어 연구윤리에 대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 학회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회 회원들의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진실성 논의의 범주는 위조, 변조, 표절 등 논문 작성과 출판 과정에서의 연구윤리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 논문 작성 전체의 과정을 말한다.
- 학회의 사정에 따라 출판위원회(또는 편집위원회), 혹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들 기구와 협력하여 연구윤리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전문직업성 고취) ① 위원회는 회원의 전문직업성 고취를 위한 포상, 모범 사례 전파, 사회봉사와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모범 전공의 표창, 좋은 의사 표창 등의 홍보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회원의 전문직업성을 고취하도록 노력한다(예시- 대한재활의학회 ‘재활의학 봉사상’).
- 윤리위원회는 학회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봉사활동 행사 등을 계획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회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가 기업 등으로부터 금전 등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학회가 제약회사 등 기업 등으로부터 금전 등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후원이나 지원에 의해 학회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 등의 지원은 공식적이고 투명하며 그 목적과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후원이나 지원 외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대외협력) ①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구와 협력한다.

- 윤리위원회는 다양한 국내외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 이슈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의료기술의 복잡성, 의료행위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윤리적 지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중환자실 자원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환자의학, 의료윤리, 법 등의 학문 분야에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식에서 카데바 도너의 사용에 대한 문제에는 이식, 중환자의학, 윤리, 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각의 학문 분야에 대한 학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데 윤리위원회가 그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국내에 있는 의료 및 생명과학 영역의 윤리, 정책, 법과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

원',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생명윤리학회' 등이 있으며 첨단기술, 데이터 의학과 관련하여서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학회, 연구소 등이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윤리 쟁점에 대해 소속 학회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경우 학회를 대표하여 이를 주관한다.

- 위원회는 해당 학회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고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장문에 대해 윤리적 검토,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학회는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안을 점검하며 보다 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입장을 제안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이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학회는 해당 학술분야의 발전, 학회원들의 전문직업성 고취 외에 의료제도의 개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비윤리적 의료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것을 권장한다.

제14조(의료윤리 진흥 활동) ① 위원회는 자체 의료윤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수 지원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의 임상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윤리에 관심이 있는 학회원을 발굴하고 이들이 학회의 윤리적 사안, 회원들의 윤리교육 등에 대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수,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특별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정신과, 호스피스-완화의학, 중환자의학, 이식 분야 등은 임상현장에 있으면서 윤리적 조언과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윤리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분야로 해당 분야 윤리위원회는 윤리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대한정형외과학회 등은 해외연수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일부를 해당 학회의 의료윤리 전문가 양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회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속 학회와 관련된 의료윤리 출판물이나 홍보물의 발간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회원 징계) ① 위원회는 학회 회원이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였을 때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에 자율징계를 상정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2. 통상적 회무 방해 행위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 회원의 징계는 학회 자율징계와 대한의사협회의 징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회의 자율징계의 경우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통상적 회무를 방해하는 등 학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에 국한하며, 그 외의 사안은 의협의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이중 징계의 회피 및 학회 내의 분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징계 처리를 위한 것이다.
- 학회원이 비과학적 의학정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치료·요법 등을 선전하거나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 등으로 전문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경우 의협의 징계절차와 별도로 학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징계 심의 절차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규칙'을 따른다.

- 회원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징계심의규칙'을 따른다. 이 사안은 다루기 매우 복잡하고 절차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지침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해당 학회 또는 학술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을 때 학회 조직 구성에 따라 윤리위원회 혹은 간행·편집위원회에

서 담당하며, 사안에 따라 두 기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 단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아니라 학회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예컨대 허위 업적으로 학회 표창을 받거나 다수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때 등은 간행·편집위원회와 상의 후 윤리위원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

④ 그 외의 징계가 요구되는 행동은 이사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학회원 사이의 갈등(근거 없이 타 학회원을 비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은 근거 없이 타 학회원을 비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은 학회 내 분쟁의 요소가 커질 위험이 있어 의협의 징계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 학회원 외의 의사 동료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등도 의협의 징계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한다.
- 의협에 회원 징계를 상신하였을 때에는 자체 징계는 하지 않는다.

제5장 기타

제16조(기타) ①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규 및 사회상규,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규와 사회상규를 따르며 학회의 사정에 따라 지침을 보완,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위원회가 제정한 윤리지침 등은 대한민국의 법규와 국제법, 그리고 헬싱키선언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 윤리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윤리지침이나 검토한 임상가이드라인 등은 의료법 등 대한민국의 법규, 그리고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과 같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윤리지침,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지침의 제·개정, 혹은 임상가이드라인 등의 검토에 있어 이러한 상위지침이나 법규와의 상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위원회는 본 운영지침 하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

-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 예컨대 전문위원의 선임과 역할, 소위원회/임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세칙)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④ 세부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다.

- 세부지침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혹은 개정이 가능하다.

제17조(운영지침의 개정) ①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지침은 학회의 제반 규정 중 하나로 이사회(또는 최종의결기구)의 결정을 통해 제정, 혹은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② 본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학회 윤리위원회를 설치할지, 혹은 언제부터 설치 운영할지는 개별 학회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 표준운영지침은 각 학회에 맞게 변경하여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4. 징계 심의 규정

제1조(징계사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본 회의 회칙이나 윤리지침 등의 위배 행위
2. 의사윤리 위배행위
 - 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 나. 비윤리적 진료행위
 - 다.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라. 전공의 선발 등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본 학회의 학회지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배 행위
 - 가. 표절, 날조, 변조 등 연구부정행위
 - 나. 저자등재권한 남용 등 연구부적절행위
 - 다. 연구결과의 허위, 과장 보고 등 행위
4.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이상의 징계 사유는 각 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2조(징계 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징계 심의를 개시한다.

1. 학회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경우
 2. 위원회에 징계 사유가 직접 접수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② 징계 심의는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 ③ 징계 심의 개시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사유에 따라 직접 징계 심의를 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제소할 수 있다.

제3조(징계 심의 여부 회의 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심의 개시를 위한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징계 심의 개시 사실을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 기타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유에 대해 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실을 7일 이내에 피심의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변호인 등) ① 피심의인은 징계 심의에 있어 변호인을 지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인을 대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인이나 변호인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명서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피심의인에 대하여 징계 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통보 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피심의인은 위의 소명서 제출 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심의인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명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심의인은 소명서에 증거 서류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청문 절차) ①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실 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피심의인이 요청한 경우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청문 기일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 대해 청문일시와 장소 기타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문 절차에는 피심의인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진술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혹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과 변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피심의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피심의인 또는 변호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징계 결정) ① 회원의 징계는 위원회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의를 종결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통지) ① 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한 뒤 7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 결정의 통지에는 징계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종류) ①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
2. 1,0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3. 경고와 시정지시

② 윤리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징계를 동일 사유에 대해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제 증명서 교부 요청권
3. 학회지 수수권
4. 학회지 투고권

5. 학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 등에서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④ 제3항에 따라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는 징계 사유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만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시효) 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징계 처분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효기간은 제3조에 따라 피심의인이 심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 중단된다.

제10조(이의 신청)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징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징계결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거나 또는 1회에 한해 재심을 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는 징계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징계 결정의 효력) 확정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회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공고) ① 위원회가 회원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하면 이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회장(또는 이사장)은 그 사실을 전 회원에게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생년월일
2. 징계 근거
3. 징계 처분의 내용

③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회장(또는 이사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또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4조(비용 부담)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에게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본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윤리강령
윤리위원회 내규
- 대한내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 자율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 대한내분비외과학회. 회칙
- 대한노인병학회. 규정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윤리규정
- 대한뇌졸중학회. 투고규정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규정
- 대한류마티스학회. 법제윤리위원회 자율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KJA 편집위원회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윤리강령
학회 윤리 및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 대한법의학회. 연구윤리규정
회칙
- 대한병리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회칙
- 대한성형외과학회. 윤리위원회 운영세칙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의료윤리규정 실행규정
- 대한소화기학회. 소화기 의사 윤리 지침
연구윤리규정
- 대한슬관절학회. 윤리위원회 내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강령
윤리인권위원회 운영규정
- 대한심장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 대한연하장애학회. JKDS 윤리규정
- 대한영상의학회. 연구 및 출간 윤리지침
윤리위원회 규정
-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윤리관련규정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투고규정
- 대한의사학회. 연구윤리규정
회칙
『의사학』 간행규정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관

대한이식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내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칙

대한통증학회. 문화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대한폐암학회. 윤리강령

대한핵의학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윤리강령

윤리위원회 규정



부록

1. 자문의견

1) 자문의견 1

- ◎ 보통 규정에서는 맨 처음에 왜 해당 규정을 정하는지를 밝히는 목적조항을 둬.
예를 들어 “본 지침은 …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분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목적조항 후에는 보통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와 같은 정의 규정을 둬. 이러한 정의 규정이 이후 지침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할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 필요.
예를 들어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 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제1조 ① ‘윤리위원회는 … 구성한다.’ 보다는 ‘윤리위원회는 … 구성된다.’
② ‘윤리위원은 … 구성한다.’ 보다는 ‘윤리위원을 선임할 때, … 구성한다.’
- ◎ 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학회의 대표자이’ → ‘학회의 대표자가’
- ◎ 제2조 ① ‘위원장은 … 선출한다.’ 보다는 ‘… 위원장을 선출한다.’
- ◎ 제3조 ① ‘부위원장은 … 임명한다.’ 보다는 ‘…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 ◎ 7쪽 여덟 번째 줄 두 번 다 ‘이사장’ → ‘위원장’
- ◎ 윤리위원회 의결에 있어서 일부 위원과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임 바람직함.
- ◎ 제4조 ① ‘간사는 … 임명한다.’ 보다는 ‘… 간사를 임명한다.’
- ◎ 설명중 “간사는 학회의 윤리이사를 임명한다.”라는 부분은 “간사가 학회의 윤리이사를 임명한다.”와 “학회의 윤리이사를 간사로 임명한다.”로 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 ◎ 제8조 ④ ‘윤리지침 등은 … 준수해야 한다.’ 보다는 ‘위원회가 윤리지침 등을 제정함에 있어서 … 준수해야 한다.’
- ◎ 제12조 ①과 ②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자문의견 2

[illegible]

원안	의견	비고
<p>대한 일반적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법조인이나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권장).</p> <p>⑤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 1/3 이상은 연임하도록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p> <p>⑥ 윤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은 연 1회 이상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p> <p>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출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비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3조(부위원장)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또는 회장)이 임명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하며,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이해상충이나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한다.</p> <p>제4조(간사) ① 간사는 위원장의 선출 방식에 따라 위원 중에서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p>	<p>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이나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권장).</p> <p>⑥ 윤리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위원은 연 1회 이상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p> <p>제4조(위원장)</p> <p>제5조(부위원장)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대표자가 임명한다.</p> <p>제6조(간사) ① 간사는 윤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교육의무가 윤리위원에 국한된다면 윤리위원으로 특정</p> <p>위원장의 선출 방식에 따른다고 할 경우, 선출과 혼동</p>

원안	의견	비고
<p>Ⅱ. 윤리위원회의 운영</p> <p>제5조(정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의결은 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③ 회원 징계 사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규칙’에 따른다.</p> <p>제6조(비정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비정기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p> <p>② 비정기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지원) ①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소속 학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근/비상근 행정직원(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매년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매년 결산을 포함한 사업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p>	<p>제3장 윤리위원회의 운영</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 소집한다.</p> <p>1. 학회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p> <p>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③ 윤리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된 경우, 해당 안건의 논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지원)</p> <p>③ 위원회는 매년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매년 결산을 포함한 사업 결과를 서면으로 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p>	<p>회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p>

원안	의견	비고
제8조(전문위원과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하며, 전문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소위원회, 임시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운영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Ⅲ.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제9조(전문위원과 소위원회 등) ②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전문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제8조(학회 윤리지침의 제정과 개정) ① 위원회는 학회 윤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며, 그 해석을 담당한다. ② 학회 윤리지침은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제정,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③ 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임상가이드라인, 또는 임상진료지침 등에 관해 그 윤리적,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10조(학회 윤리지침의 제정과 개정) ② 학회 윤리지침은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제.개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 교육) ① 위원회는 소속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소속 회원들의 직역, 교육 내용의 타당성, 강사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 출판위원	제11조(회원 교육) ② 위원회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학회 회원들의 직역, 교육 내용의 타당성, 강사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원안	의견	비고
<p>회 등 유관 기구와 더불어 연구윤리에 대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p> <p>제10조(전문직업성 고취) ① 위원회는 회원의 전문직업성 고취를 위한 포상, 모범 사례 전파, 사회봉사와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학회가 기업 등으로부터 금전 등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p> <p>제11조(대외협력) ①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구와 협력한다.</p> <p>② 위원회는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윤리 쟁점에 대해 소속 학회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경우 학회를 대표하여 이를 주관한다.</p> <p>제12조(의료윤리 진흥 활동) ① 위원회는 자체 의료윤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수 지원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소속 학회와 관련된 의료윤리 출판물이나 홍보물의 발간 등 의료윤리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p> <p>제13조(회원 징계) ① 위원회는 학회 회원이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였을 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자율징계를 상</p>	<p>제12조(전문직업성 고취)</p> <p>제13조(대외협력)</p> <p>제14조(의료윤리 진흥 활동)</p> <p>제15조(회원 징계) ① 위원회는 학회 회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에 자율징계</p>	

원안	의견	비고
<p>정할 수 있다.</p> <p>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p> <p>2. 통상적 회무 방해 행위</p> <p>② 회원의 징계 심의 절차는 ‘윤리위원회 징계심의규칙’을 따른다.</p> <p>③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p> <p>④ 그 외의 징계가 요구되는 행동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IV. 기타</p> <p>제14조(기타) ①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규 및 사회상규,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② 위원회가 제정한 윤리지침 등은 대한민국의 법규와 국제법, 그리고 헬싱키선언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 윤리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의사 윤리강령과 지침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본 운영지침 하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세부지침을 둘 수 있다.</p> <p>④ 세부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 개정할 수 있다.</p> <p>제15조(운영지침의 개정) ①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p> <p>② 본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p>를 상정할 수 있다.</p> <p>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p> <p>2. 통상적 회무 방해 행위</p> <p>④ 그 외의 징계가 요구되는 행동은 학회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5장 기타</p> <p>제16조(기타)</p> <p>제17조(운영지침의 개정)</p>	

2. 공청회 의견

내용
<p>의견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침안 잘 규정된 것으로 보임. - 제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알려질 필요성이 있음. - 1조 구성 영속정보다는 연속성이 좋지 않을까 싶음. - 이사장 임용 윤리이사장 말하는 것보다는 신경정신과회처럼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보임. - 징계와 관련하여, 위원장 권한으로 의결권 부여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음. 회원자격이 없는 외부자문단이 징계 권한을 가지는 것은 학회 회원의 동의가 필요함. -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학회도 있기 때문에(소규모 학회) 해당 내용 고려 필요성 <p>의견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구성에 있어선 엄격할 필요성이 있음 - 1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 회장도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단순 참관인인지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 4조. 의학회 회원이라는 표현이 의학회 회원인 학회인지, 학회 회원인 의사 개개인인지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p>의견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징계 요인이 의사 개개인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음.

의견 4

- 의학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학회, 개별 학회별로 입장이 다름. ex) ca 관련.
- 개별 학회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회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개별학회윤리지침: 통상적인 윤리 이외에 의료윤리법률과의 관계도 어디까지 지침을 내릴지 고민해야 함.

feedback 1

- 대한의학회 회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학회에 속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 회장 징계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회장은 지켜보는 역할임.
- 일반적인 학회에 속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 추가
- 학회 간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feedback 2

- 학회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지 제시하겠음
- 개별 학회 내부에는 학술적인 부분이 강조되도록 징계와 분리하였음.
- 위원장이나 윤리 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의협에 제소하는 식으로도 별도 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범조인이 포함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의견 5.

- 윤리위원의 기능에 대한 의문.
- 징계나 평가가 들어가 있음. 징계가 꼭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할까? 징계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윤리위원회는 학회 내 회원 간 윤리의 역할을 담당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옵션으로 같이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의견 6.

- 표준운영지침의 성격에 대한 의문.
- 운영지침이 학회운영규정을 제시하고 해설의 목적인지, 표준규정을 전제하지 않고 윤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만 있는 건지 구분할 필요. 규정 안에 a는 b 규정을 따른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적음.
- 학회 명예훼손, 회원 간 불화 / 윤리 위반 내용은 분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의견 7.

- 여러 학회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임.
- 3조 역할과 기능에서 보면 회원 윤리 교육 프로그램 수행과 같은 모두 해당. 해설서가 있다면 3가지 항목(교육, 연구윤리, CY 관련~제약회사 스폰서링)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의견 8.

-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윤리위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징계위원회도 포함할 수 밖에 없음. 이런 환경에서 위원장, 위원 선출이 신중하게 고민되어야 함.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에 대해 고민 필요함.
- 심의와 관련된 절차가 징계 말고는 따로 없음. 추가되었으면 함.
- 징계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역시 대한의사협회도 (실명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은데, 개별 학회에서 실명 공개가 가능할지 의문임.

2-1. 공청회 전사본

발표자: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의학회에서 의료윤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간단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의학회는 회원이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그 학회가 회원학회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한의학회는 회원이라는 말 대신에 회원학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대한의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2022년까지 이제 52주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3개의 회원학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의료윤리학회도 회원학회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초학에서부터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전문과목학회 그다음에 각종 세부 융합 학회들이 포함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체 학회가 193개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엄선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 학회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의학회의 설립 목적은 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 and 회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의학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통해서 국민 보건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학회들은 도대체 의학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대한의학회 안에 의료윤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부터 구성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멤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하나 빼고는 다 의료윤리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심지어 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의료윤리분야에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회원학회에도 의료윤리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6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192개 학회에 설문지를 보냈고, 그중에 56개 학회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56개 학회 중에서 68%인 38개 학회가 윤리위원회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리 관련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회가 있다고 얘기한 학회가 38개이고, 윤리 관련 임원이 있는 경우가 42개 학회입니다. 윤리 관련 규정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연구 윤리 규정입니다. 연구 윤리 규정은 41%가 갖고 있고, 전문직 윤리 규정은 2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손상 등 기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전문학회다 보니까 연구와 관련된 연구 윤리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 대상으로 하는 윤리 교육이 있는가를 물

어쨌든 그중에서 30% 정도인 17개 학회가 윤리 교육이 있다고 했고, 사실 윤리 이사도 있고, 윤리위원회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70%가 교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3년 이내에 회원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7개 13%가 징계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윤리 이사가 있다면 윤리 이사 연합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주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의 워크숍이 있으면 좋겠나 답변을 받았더니 가장 많은 게 전문직 윤리였습니다. 두 번째가 회원 제재 및 징계 적용, 그 다음에 연구 윤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 즉,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학회의 윤리 증진을 위하여 대한의학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봤는데 90%가 지원을 바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지원을 받을 경우에 선호하는 방식은 교육 자료 제공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윤리에 대한 지침 개발, 그 다음이 일반 대상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고 의학회에서 제공해 주길 바라는 교육 내용은 윤리위원회 운영 경험, 권장 지침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와 사회 윤리에 대한 자율 규제, 학회 역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는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적은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속 회원에게 제공하고 싶은 교육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의료 윤리 기본 원칙과 의사결정 그리고 연구 윤리 기본 목표까지 그다음으로 의사와 사회 윤리, 자율 규제, 전문학회 이런 것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학회가 의료윤리학회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학회의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요약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운영 콘텐츠 개발을 하게 됐고, 좌장으로 계시는 권복규 교수님께서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청회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면 학회의 윤리 이사분들을 다 모아서 연합체를 구성하고, 교육 및 워크숍 진행하는 과정을 밟아갈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표준 운영 지침 외에 다른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학회의 윤리를 증진시키고자 대한의학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짧은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복규 교수: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학회 표준 운영지침 안입니다. 연구진이 개발을 해서 가안을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여러 생각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는 분은 김도경 교수님인데 김도경 교수님은 동아의대 졸업하시고, 동아의대에서 의료윤리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김도경 교수:

학회 표준운영지침 안은 권복규 교수님과 개발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연구 윤리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 방향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아마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간과되거나 인지가 잘 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윤리위원회의 우리의 역할을 같이 다룰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통적으로 의학 관련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들은 전문 직업성의 교육이나 복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에 대한 계도, 징계 그리고 임상 윤리, 의료 윤리 또는 임상 윤리 쟁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그리고 학회별 지침 개발 등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표준 운영 지침과 특별히 회원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데 징계 심의에 대한 별도의 세칙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운영 지침입니다. 우선 5개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역할과 기능, 회원 징계,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운영안은 가지고 계신 학술 윤리회 자료집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선 윤리위원회가 단순히 학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학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회 회원이 또 의학 전문 직업성을 잘 다루도록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조언, 조정, 징계 등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학회의 이사진들과는 조금 분리가 되거나 약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전문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선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운영 절차, 윤리위원회 활동의 승인 방식 그리고 윤리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이 운영 지침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해서 5인 이상으로 하였고요.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을 저희가 윤리위원이라고 했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만 그러니까 위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이야기한 중립성이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요. 별도의 추천위원회나 총의회나 아니면 총회 또는 대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안, 대부분의 학회가 하고 있는 이사장 임명 등 세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추천위원회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지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은 선임 전후 차기 이사장과 선임 전후 차기 회장으로 구성하여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대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이사장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내에서의 호선도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사장 임명이 대부분의 학회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이사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회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독립권자와 임명권자를 분리하는 것, 즉 이사장이 임명하지만 선임 이사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허가나 승인 보다는 보고를 하는 방식 그리고 외부의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이들에게 의결권까지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대부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간사는 예를 들어 앞서서 위원장 선출이 이사장 임명이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임명한 윤리이사가 간사로 들어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견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리위원은 의료 윤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로서 성별, 연령, 직업을 감안해서 구성할 것, 그리고 위원은 대부분 많은 윤리위원회에서 변호사나 법조인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의료 윤리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윤리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법조인 또는 의료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유보 시에 그 임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이 윤리이사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넣어보았고요.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연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윤리위원이 연 1회 이상의 의학회 주관 의료윤리 워크숍에 참여해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운영 부분입니다. 우선 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규회의가 있는데요. 학회마다 정기회의가 없는 윤리위원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연 1회 정도 개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정기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의결은 윤리위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특히 징계 사항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인.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징계 심의 규정이나 별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위임장 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데요. 위임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라고 검토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학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고요. 여기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행정 직원, 상근 비상근 행정 직원 등을 둘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위원회,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들의 운영 사항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역할과 기능인데요. 역할은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회 의료윤리 지침 개정, 임상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대한 검토·자문, 회원 윤리 교육 프로그램 수립·실행·평가, 회원의 직업 전문성 고취를 위한 활동, 연구 윤리에 대한 내부 정책 수립 및 교육, 위원회 예산 수립 운영 결과 보고, 회원 징계 그리고 그 외,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학회의 역량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회 윤리 지침, 의료 윤리 지침 개정 및 정비 해석인데요. 학회 윤리 선언, 의료 윤리 지침, 강령 등을 학회에서 만드는데요. 거기에 개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지침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해설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지금 내과의사 윤리 선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과 학회에서는 윤리 선언을 가지고 있는데 5조에 보면 내과 의사는 의사의 품위와 전문성을 지키고 더하여 동료 의사의 비효율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해설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품위가 무엇인가, 의협에서의 품위가 무엇인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한다는 게 뭐냐, 기술적인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품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그리고 의료적 행위 범주에 대한 설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 등이 제안이 되고, 관련 법령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해설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2017년도에 만들어진 의사 윤리 강령 및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품위 유지 항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품위 유지 항목에서 핵심 용어,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법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할로서는 임상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인데요. 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환자 의학 같은 경우는 신체 억제나 중환자실에서 진정 같은 것들이 해외 가이드라인이 번역돼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윤리위원회가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COVID-19 중환자실에서의 자원 분배의 문제들, 그 다음에 수술 환자 안전 그리고 CCTV와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 비의료인

수술은 정형외과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됐을 때 윤리위원회가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상 현장과 관련된 윤리적 사안에 대한 학회 공식적인 입장 발표 대변 시에 검토하고, 의견을 주는 것인데 산부인과 학회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의견, 회원 공지문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학회에서는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 허용 논문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 윤리위원회가 의견을 줘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회원의 윤리 교육 프로그램 수립·실행·평가입니다. 이것이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윤리위원회의 큰일이고, 대부분의 윤리위원회는 이것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회원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수립 시행 평가하도록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술대회에서 윤리 세션을 만들어서 전공의 또는 회원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과 학회가 하나의 예가 되는데 내과 전공의 의료윤리 사례집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대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환자의학 학회에서는 중환자실 의료윤리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책들로 인해서 해당 학회 회원들에게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 워크숍 진행, 아니면 사이버 윤리 교육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윤리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내과 학회의 화면인데요.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사이버 윤리 교육이라는 창이고요. 그 위에 바로 보시면 내과 전공의 의료 윤리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이버 동영상으로 만든 교육 자료가 내과 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역할과 기능은 회원의 전문 직업성 도출을 위한 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학회에서 공익 활동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모범 공동 표창, 좋은 의사상 표창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재활의학회를 보니까 재활의학 봉사상에 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연구 윤리에 대한 내부 정책 수립 및 교육인데요. 출판 편집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출판 윤리를 넘어서서 연구 진실성 수준에서 연구 윤리 지침을 제안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교육 환경으로 인한 연구 인력 확보에 대한 지침,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학회 산하 학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출판 가이드라인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의 역할로는 비윤리적인 제도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다음 우리 학회와 관련됐지만 뭔가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대처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학회의 이해 상충을 확인하고, 대처 방안 및 제안을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스폰서 같은 게 있을 때 학회 내에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 징계는 별도의 조로 나누었는데요. 회원 징계는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과 윤리위원회 밖에서 징계하는 것들로 구분해보았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할 때는 학회 내에서의 갈등을 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는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통상적인 회무를 방해한 경우, 이 정도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 것은 의사협회에 상정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는 학회원끼리의 분쟁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의협에 상정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것은 연구 윤리 규정을 대부분의 학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가 징계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그 학회의 상황에 맞게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윤리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윤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는데 각 학회에서 회원 중 임상을 하시면서 아니면 혹은 관련 분야 일을 하시면서 전문가 윤리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학회 내에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방안으로 이 문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윤리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내외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형회과학회를 찾아보았더니 해외 연수 지원을 매년 한 3명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윤리쪽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국내외 기관 단체 윤리 관련 이슈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인데 협력 기관은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카데바의 이식 문제다 라고 하면 이식학회, 중환자의학회, 법, 윤리학회들이 다 모여서 사안들을 토론해야 될 텐데 여러 학회들의 의견과 의중이 필요한 이슈들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표준 운영 지침이고요. 그다음에는 징계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징계 심의안도 학회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고 슬라이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유부터 해서 15조 비용 부담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징계 사유는 법령 또는 본회의 회칙이나 윤리 지침 등의 위배 행위 그다음에 의사 윤리 위배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 행위를 하거나 비윤리적 진료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전공의 선발 기타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금품을 호소하는 행위 그리고 학회지와 관련된 연구의 표절 날조 공조 등 연구 부정 행위랑 저자 문

제, 그 다음에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받은 것들 그다음에 연구 윤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 학회에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랑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징계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이냐 아니면 안건을 상정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대략적으로 2조에서 8조 정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먼저 접수가 되면 상임이사회에서 부의가 되거나 아니면 윤리위원회로 직접 접수가 되거나, 이렇게 접수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심의 회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회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전에 위원회 회의가 있어야 되고요. 심의를 할지 말지 개시를 위한 회의이고, 이때 윤리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 7일 이내에 피심의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하자라고 하면 심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심의회의는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심의회의가 열리게 되면 윤리위원회 3분의 2 출석 그리고 3분의 2 찬성으로 징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위임장 문제들에 대해서도 학회 내에서 다루셔야 될 텐데 가능한 한 징계와 관련해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피심의인 변호인 변호이 가능하고, 제3자 증인 신청 진술이 가능하고, 결정이 되면 7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고요. 사안이 아주 중대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하면 청문 절차가 심의 회의 전후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 후에 20일 이내에 피심의인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통보를 받게 되면 다시 3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이때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60일 이내에 이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결정 후에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징계 종류는 의협의 징계 쪽을 따와서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선 만들어봤는데요.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회에서 시행하는 징계 종류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회원 권리들이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권리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금, 그 다음에 경고, 시정 지시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주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전 회원에게 공고하고요. 공고 사항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에 관한 심의 의결 사실과 내용이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학회가 가능하게 지켜줘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 집행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징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자:

안녕하십니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내과 교수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 과학회가 있고, 소화기내과 연관 학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담도학회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고, 하지만 다른 학회처럼 편집 위원회에 두고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 지침안이 잘 구성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이사장님도 사실은 인지를 잘 하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뉴스레터 형식으로 알려주시면 나중에 실제로 퍼블리시가 됐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침을 살펴봤을 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1조의 구성을 보면 영속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독립성 연속성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선출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사장이 임명한 윤리이사가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기존 관행보다는 신경정신의학회 예시와 같이 독립된 추천위원을 활용한다고 하는 방향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회장 신분의 회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징계에 관련한 외부 자문단 활용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위원장 권한으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 회원 중 평의원 중으로 자격을 주게 하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특성을 두고 있는데 회원 자격이 없는 외부 자문단이 징계하는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개별 학회별로 학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가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임원진 선출이나 회원 정계 등에 있어서 일체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학회가 현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원도 참여할 수가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회별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연임하도록 한 규정은 아주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학회가 강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임명하고 있는데 저희 췌장담도학회는 외과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3d 업종이라서 신규 회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멤버가 100명이 안 되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현직 의사들에 대해서 의료법 관련 범위나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와 입원 시 형사처벌이나 행

정처분 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표준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회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조를 보면 구성원으로 위원장 한명, 위원, 부위원장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집에 의하면 2022년 3월부터 구성을 한 회장님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단순한 참관인인지 아니면 위원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징계 규정 관련해서 제4조입니다. 의학회 회원은 의사들 개개인이 아니라 각 분야별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의하면 의학회 회원이 개별 학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별 학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은 회원이 의사 개인 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 징계라는 것이 학회를 선정하는 것인지 의사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인지 규정을 따로 마련하시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징계 규정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징계 요구인이 의사 개개인을 혹시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공의 선발 관련해서 금품 수수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개인이 받는 것이지 학회가 받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 규정에도 의사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 규정도 그렇고 개별 학회에 대한 것과 의사 개개인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회 윤리위원회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별 학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각자의 입장이 다른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PA 관련한 문제 중에서도 작년에 유명 대학병원 원장님께서 PA를 합법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굉장히 비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개별 학회에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학회가 과연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이해관계를 잘 조성하고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행위 시 성추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될 수가 있지만 학회별로 첨예하게 의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조율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학회 윤리 지침도 있고, 또 개별 학회 윤리 지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개별 학회 윤리 지침 내용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윤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의료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과연 어느 범위까지 설정을 하도록 위원회가 지침

을 내릴 것인지 또는 조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리지침이 생명 윤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입장에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규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령이 정하지 않은 상황을 학회 윤리 지침이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윤리와 같은 지침은 훨씬 더 폭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의학회 윤리위원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자: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의학회의 회원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이상 법인들끼리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거는 회원 학회의 학회원들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윤리위원회는 다른 학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회를 서포트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회에 속한 회원들에 대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타 기관과의 관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학술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민간의 부분은 저희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잘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교수:

채장담도학회 말씀을 듣고 학회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학회 내에서는 의학회 산하의 학술적인 목적이나 연구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게 징계를 이렇게 분리한 것이고 학회 내에서는 학회의 본회의나 아니면 학회 규정들에 대해서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회의 구분을 위원장과 관리 인사를 구분하는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넣었는데 실제로 되게 어려운 학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잘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회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회원들 간 갈등도를 위험으로 제시하는 것도 학회마다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학회 같은 경우는 특

별히 법조인들도 같이 들으셔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자:

윤리위원회 기능만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윤리위원회 기능 안에 좋지 않은 징계나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가 꼭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징계는 징계위원회로 별도의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를 두고 윤리위원회는 그보다는 역시 회원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윤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윤리가 처벌하고 징계하고 평가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방식을 제안하고 모델을 제시할 때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혹시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김도경 교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 옵션들을 다양하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이사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학회에서 그러면서 징계가 가능하고 이사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역할에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좀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의견자:

준비한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문은 이 표준 운영 지침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게,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통상 우리가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이나 이런 법규가 있을 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까를 기술해 놓는 그런 형태가 표준 운영 지침의 이름으로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협회 윤리위원회 표준 운영 지침안이 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전제로 한 건지 예를 들자면 규정을 제시하고 표준 규정이죠. 말하자면 규정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표준 규정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지 약간 델리케이이트한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74페이지 우리 발제문을 아까 제4조 회원 징계를 보시면 세 가지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 그리고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

의 경우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가 징계, 세 번째 그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요청한다라고 세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통상 어떤 규정에 집어넣기 굉장히 애매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우리는 연구 윤리 진실성 위반은 별도의 연결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의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에 상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하고 연관이 첫 번째 어떤 규정을 만들고 표준 운영 규정의 표준 운영 지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규정을 전제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지 그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약간 사소한 한데 거기 윤리위원에서 징계를 보면 개별 학교의 윤리위원회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통상적 업무 방해 행위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보여주면 징계 사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윤리 위반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산부인과에서 불임 시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회원이 그걸 위반했다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학회 자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다른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디 누락이 된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어서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복규 교수:

제가 좀 답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해설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의협회가 다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달라 이런 의지가 있어서 우리 학회에서 표준 안을 제시하고 지침을 한번 해석해서 붙여서 지침으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학회마다 상황들이 너무 달라서 본인은 안을 제시하고, 학회의 성격에 따라서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학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학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결국 런칭을 열심히 시켜주는 그런 지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여러 학회에서 공통이 정도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지켜야 되는 그런 기준들은 모든 회원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능은 제가 보니까 임상 가이드라인 권고안 이런 건 모든 형태가 다르겠쥬. 그렇지만 회원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라 이거는 다 해

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 윤리에 대한 세부 지침 이것도 사실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기타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 제약회사 스폰서 COI 이런 문제도 사실 임상 학회라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밖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지침에 이렇게 집어넣기는 좀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해설서를 정말 잘 만들어 주신다면 이 세 가지 항목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예를 들면 교육 부분 같으면은 의료인 교육을 잘 실시해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제 욕심 같은 경우는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해야 된다는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모든 학회에 기한이 들어가면 학회에서는 굉장히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명씩 저희한테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한다는지 아니면 그런 미니멀 역할을 요구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구들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필요한 액티스들을 잘 뽑아서 해설서에 담아주시면 별도 지침이 있더라도 대부분 학회들이 그런 걸 찾아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 지침을 보면은 스폰서링을 아주 클리어하게 봤고 그렇지만 그게 아카데미 어떤 프로그램을 크립션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들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의학회만 해도 그냥 도시락 제공하는 회사에서 강사도 제공하고 강의 슬라이드도 주고 그러면 밥 먹는 대가는 거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약에 대한 설명. 그런 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충분히 이번에 논의를 해서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도의 특히 아카데미 그런 인트로이트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COI를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방안 같은 거는 해설서에 좀 담아주셨습니다. 그런 제안으로 들어옵니다.

의견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모두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이라고 볼까요.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위원으로 통합해서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색깔을 갖고 정당성 확보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에서 설문 받은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학회가 160개가 넘지만 응답한 학회 70개 중에 윤리위원회가 있다는 학회가 38개밖에 안 돼서 이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회에서만 가능한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 건지 그다음에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3개 위원장 선출 방법 중에서는 사실 윤리위원회 초선이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개는 학회에서 윤리 이사가 윤리 위원장을 맡고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는 대개는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임명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결국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심의와 관련된 절차가 징계 말고는 다른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다음에 징계 심의가 결국 다 끝나면 이제 권고를 할 텐데 권고사항에 보면 피심의인의 성명 징계 근거에 대한 징계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처분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변호사님한테 여쭙볼 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개를,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법에는 공개라든지 공개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법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별 학회보다 더 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실명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런 개별학회에서 실명 공개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이 부분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